

불평등에 관하여: 우리나라 불평등 추이와 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지원**

김동욱***

구교준****

불평등은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불평등을 생애주기에 따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보다 단편적으로 보는 관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하여 불평등 현상을 파악하고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불평등의 양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최근 10여 년간의 소득 불평등과 청소년기의 교육 불평등, 청장년기의 고용 불평등, 노년기의 건강 불평등을 살펴본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른 불평등 양태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보다 입체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불평등 현상을 파악하고 교육과, 고용, 건강 분야의 불평등 예측확률을 도출함으로써, 불평등의 구조적 양상을 보여주고 향후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상당한 함의를 줄 수 있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불평등, 생애주기

* 본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1038649).

** 제1저자,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복, 불평등, 행복 불평등, 자동화 등이다(wldnjs21@korea.ac.kr).

*** 공동저자,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복, 불평등, 계량행정 등이다(dongwook1995@korea.ac.kr).

**** 교신저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복, 삶의 질, 지역혁신 등이다(jkoo@korea.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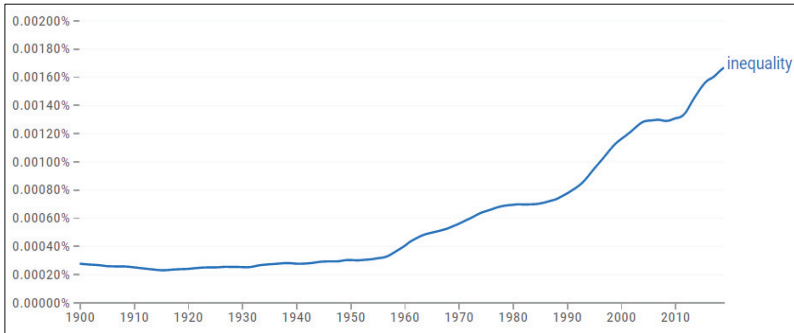
I. 서론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한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이슈이다. 개인이 가지는 역량이 모두 다르므로 자유로운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이상 차이는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여기에 개인이 타고난 배경의 차이까지 고려한다면 개인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불평등에 대한 관심도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구글이 데이터베이스화 한 전 세계 수십억 건의 인쇄 출판물에 대한 Ngram 검색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림 1>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성숙하고 세계 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1960년대 이후로 “불평등(inequality)”이란 단어가 인쇄 출판물에서 등장하는 빈도가 급격히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하게 빈곤했던 시절에는 개인들 간의 차이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경제 성장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차이가 커지면서 불평등은 대다수 산업화된 국가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우리 사회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불평등”을 키워드로 네이버의 최근 뉴스를 검색하면 우리 사회의 커져가는 불평등에 대한 우려 섞인 내용이 대다수이다. “자산 불평등 심화…상하위 격차 64배,” “고교내신 상대평가 지역 간 교육 불평등 갈수록 커져,” “수도권 주민 72% 기회 불평등 체감,” “가구소득 증가했지만, 불평등 심화,” “불평등, 양극화 심화…황제세 도입은?,” “악화된 건강 불평등, 건강세로 해소하자” 등과 같이 불평등 담론의 내용도 단순한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건강, 교육, 기회 등 사회문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지속해서 증가하였다는 연구나(김낙년, 2018; 홍민기, 2015), 최근에 특히 자산 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연구 등과도(이우진, 2018; 전병유·정준호, 2014; 정준호·전병유, 2020) 일맥상통한다.

다만 이와 같이 뚜렷한 문제 인식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연구에 있어 기존 문헌의 아쉬움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대부분의 불평등 연구가 생애주기 프레임을 고려하여 불평등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연구의 경우 불평등의 중요한 특징인 구조적 경향 즉 소득이나 교육의 불평등이 고용이나 건강,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얹혀 매우 복잡한 구조적 불평등으로 확대재생산 되어 나간다는 특징을 밝히고 있으나(곽재현·홍경완, 2017; 구교준 외, 2016; 김동진 외, 2013; 방하남·김기현, 2002; 여유진 외, 2007; 정인관 외, 2020; 정혜주·Muntaner, 2011), 생애주기적 관점은 그리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림 1〉 “불평등(inequality)”에 대한 구글 Ngram 검색 결과



출처: 구글 Ngram

생애주기 프레임은 초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를 걸쳐 최종적 소득 사이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불평등의 또 다른 구조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틀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소득이면 소득, 교육이면 교육 등 관심의 대상이 되는 좁은 범위 안에 주로 갇혀 있거나, 다중격차의 차원에서 불평등을 분석하고 있으나, 생애주기를 구별하지 않고 파편적으로 분석할 뿐이다. 혹은, 생애과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주목하기도 하였으나(이현주·정은희, 2016), 주요 불평등의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과정 없이 불평등의 영향요인을 찾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의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언론 기사나 연구들은 일반적인 인식과 비슷하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 정도가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도 상당수 존재한다(김지원 외, 2021; 박종규, 2017; 이성균 외, 2020; 최병천, 2022). 박종규(2017)와 이성균 외(2020)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지원 외(2021)는 소득뿐 아니라 건강, 행복, 근로시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최근 여러 매체에 소개되면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좋은 불평등”의 저자 최병천(2022)도 우리 사회 불평등의 성격은 성장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불평등이며, 결과적으로 최근 들면서 불평등의 정도가 완화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과 분석의 괴리는 불평등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처방을 논의하는데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다. 정책의 처방은 사실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분석에 바탕을 둔 임상과학의 성격을 가지는데(구교준, 2009), 이러한 괴리는 정책의 임상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분석을 시도하려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불평등 현상이 최근 10여 년간 어떠한 양태를 가지고 변화해 왔는지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건강 등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기존의 국내 불평등 연구가 어느 시기에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에 따라 결과가 혼재되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10년의 시점에 삶의 여러 측면에서 관찰되는 불평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뿐 아니라 향후 정책적 논의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득, 교육, 고용, 건강 영역의 불평등을 생애주기 분석 틀 안에서 분석함으로써 불평등의 구조적인 현상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불평등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여 생애주기에 걸쳐 한 분야의 불평등이 다른 분야의 불평등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탐색적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한다.

II.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무엇의 불평등인가?

불평등 연구가 어려운 점은 불평등의 대상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가장 흔하게는 소득 불평등을 이야기하지만, flow에 해당하는 소득 이외에 stock 개념으로 자산 불평등도 흔히 언급된다. 이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답한다면 자원의 불평등도 고려할 수 있다. 자원은 흔히 부동산이나 금융자산과 같은 경제적 측면을 의미하지만, 자유나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 자원과 연극, 영화, 콘서트와 같은 문화적 자원 등 비정형화된 자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자원 불평등은 불평등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핵심 현상이다(신광영, 2013).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불평등의 대상은 효용이다. 효용 개념의 출발점은 공리주의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공리주의의 효용은 흔히 쾌락이나 행복과 동일시된다. 공리주의의 관심은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벤텀의 주장에서 나타나듯이 효용의 분포 보다는 효용의 총량에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효용의 불평등은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김지원 외, 2021). 다만 최근에는 국가 수준에서

넓은 의미에서 효용이라고 볼 수 있는 행복의 불평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Stevenson & Wolfers(2008)와 Dutta & Foster(2012)는 미국을, Niimi(2016)는 일본을, Yang et al.(2019)은 중국을, 김지원 외(2021)는 한국을 대상으로 행복 불평등의 추세와 영향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 번째 불평등은 Sen(1980)과 Nussbaum(2000)이 발전시킨 역량이론(capability theory)에서 찾을 수 있다. 역량의 정의에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대체로 개인이 의미와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교육),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추구하며(고용),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건강). Sen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자원과 효용이 불평등 담론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우선 자원의 경우 개인이 처한 상황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역량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원의 양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양은 크게 다를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가지는 효용과 선호 체계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수준의 자원이 효용 측면에서 개인 간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원과 효용 중심의 평등은 오히려 불평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대안으로 역량을 중심으로 불평등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접근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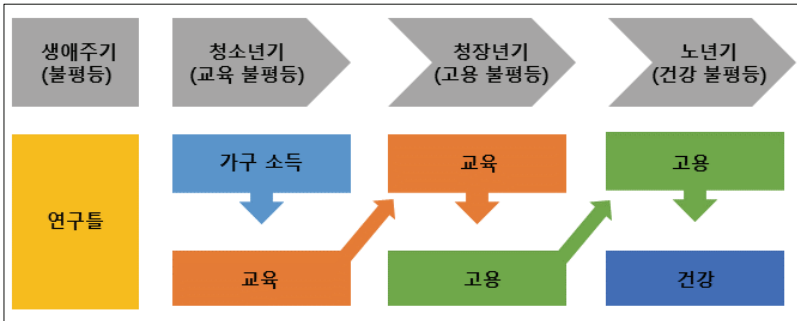
한편 위의 논의가 ‘어떤’ 불평등을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적 측면이라면, 이렇게 다양한 불평등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관되는지 또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 불평등은 교육이나 고용, 건강 불평등으로 연결되며 불평등 현상을 강화하고 구조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이해하고 분석의 틀에 반영하는 것은 불평등 연구에 특히 중요하다. 불평등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소득 불평등을 중심으로 분석된 연구들이 많은데, 소득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의 관계(구교준 외, 2016; 방하남·김기현, 2002; 여유진 외, 2007; 정인관 외, 2020), 혹은 소득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구교준 외, 2016; 김동진 외, 2013), 소득 불평등과 여가 불평등 간의 관계(곽재현·홍경완, 2017) 등에서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 밖에도 고용과 건강 불평등(정해주·Muntaner, 2011), 교육과 건강 불평등(김동진 외, 2013) 등과 같이 부문별 불평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처럼 많은 연구가 불평등을 하나의 부문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불평등이라는 현상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평등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얹혀 있는 불평등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불평등을 다양한 측면을 가진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소득, 교육, 고용, 건강의 불평등이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어떻게 구조화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려 한다. 소득 불평등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불평등의 대상 중 자원 불평등에 해당한다. 소득은 대표적인 자원으로 다른 분야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구조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육, 고용, 건강 불평등은 대표적인 역량 불평등에 해당되며, 생애주기를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구조화된다.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고용 불평등(이주미·김태완, 2022)이나 노년층에서의 건강 불평등(이소정 외, 2008)은 좋은 예이다.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청소년기에 사교육 격차와 그 결과로 교육 불평등을 야기한다. 이러한 청소년기 교육 불평등은 대입 결과의 차이를 만들고 극심한 학벌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대변되는 청장년기 고용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청장년기 고용 불평등은 다시 소득격차를 만들고, 이는 은퇴 후 노년기의 건강 불평등에까지 연결된다. 기존 연구의 경우 생애 주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불평등을 분석하기도 하였으나 생애임금 소득 불평등 연구와 같이 하나의 불평등을 다루거나(김지운, 2020), 불평등이 누적된다는 측면에서 노인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지은정, 2011). 또는, 주로 소득으로 인한 격차에만 주목하여 다른 영역과의 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이채정, 2022).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적인 자원으로서 소득과 역량 불평등의 세 가지 영역(교육·고용·건강)을 구조적으로 연결시켜 생애주기에 따라 그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한다. 첫 번째로 다양한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교육·고용·건강 부문의 구조적 불평등을 파악한다(〈그림 2〉 참조). 네 가지 부문별 불평등 수준을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교육부의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살펴보았다. 분석 시기로는 2010년 전후를 기점으로 하여 2020년까지 약 10여 년의 기간을 활용하였다. 두 번째로 한국 노동패널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자가 가장 많이 추가된 2018년을 기점으로 이후 4년 동안의 표본을 취합하여 각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불평등, 고용 불평등, 건강 불평등의 탐색적 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2〉 생애주기에 따른 불평등



출처: 저자

2. 어떻게 불평등을 측정할 것인가?

사회과학 연구에서 개념의 정의만큼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측정이다. 기존 연구에서 불평등은 흔히 가계 단위의 설문조사를 활용한 표준편차를 통해 측정된다. 또한 불평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소득의 경우 지니계수, 5분위계수 등과 같은 비율 지표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불평등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첫째, Atkinson(1970)이 일찍이 경고한 바와 같이 불평등 측정 도구의 메커니즘이 달라지면 분석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주제에 따라 어떤 불평등 측정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선택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불평등의 측정에 폭넓게 사용되는 가계 설문은 경우 설문 대상의 대표성을 지표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설문 응답에 동일한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여 모집단을 추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 불평등 지표의 선정에 있어 일괄적으로 한 가지 통일된 지표를 사용하기보다는 각 영역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2) 또한 설문 표본의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표본가중치를 기반으로 모평균에 대한 불편추정량을 계산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표본가중치의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표본가중치는 설문조사 데이터의 대표성과 추정량의 비편향성(unbiasedness)을 담보하기 위해서 활용되는데, 이는 각 조사 단위가 표본에 포함될 확률의 역수로 정의된다(Deaton, 2018; Lohr, 2009). 더불어 이렇게 정의된 표본가중치는 해당 표본이 대

표하는 사람의 수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앞선 정의에 의해서 표본 가중치의 합은 모집단 수 N 과 동일하기 때문이다(단순 임의추출의 경우, 표본포함 확률 $\pi_i = \frac{n}{N}$ 이며 $\sum_{i=1}^n w_i = \sum_{i=1}^n \frac{1}{\pi_i} = \sum_{i=1}^n \frac{N}{n} = N$ 이 성립한다). 이때, 표본가중치를 활용한 모수 추정 과정은 표본설계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가능하나 식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평균과 같은 추정량은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추정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식 (1)은 설문 조사 설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층화 이단계 집락추출법에 대한 Horvitz-Thompson 추정량이다(Lohr, 2009). 이때 $\bar{X}_s$ 은 Horvitz-Thompson 추정치를, w 는 가중치, X 는 해당 표본의 응답 값, H 는 층(stratification)의 수, n_h 는 층 h 의 조사구 수, m_i 는 조사구 i 내 표본 가구의 수를 의미하며, 정의상 모집단의 수는 $N = \sum_{i=1}^S w_i$ 이다. 이처럼 표본설계 방식에 무관하게 평균에 대한 추정량은 가중평균으로 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불평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bar{X}_s = \frac{\sum_{h=1}^H \sum_{i=1}^{n_h} \sum_{j=1}^{m_i} w_j X_j}{N} = \frac{\sum_{i=1}^S w_i X_i}{\sum_{i=1}^S w_i} \quad (1)$$

1) 소득

소득 불평등은 핵심적인 자원 불평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 5분위와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두 개의 지표는 소득 불평등을 비롯한 경제적 불평등을 분석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도 매년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선 별도로 이들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데, 소득지표를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도중에 바뀌었으며 제공되는 소득과 순자산에 대한 지니계수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17년에 7차 OECD 소득분배 지표 지침 발표 및 학계 요청에 따라 통계청은 소득분위 산출 방식을 수정하였다. 이전에는 가계동향조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출하였지만, 2017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서의 경상소득¹⁾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지니계수는 원래 가

1)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의 합

처분소득을 기반으로 추정되는데, 7차 OECD 소득분배지표 지침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에 대한 정의가 수정됨에 따라 2017년 이후부터는 <표 1>과 같이 사적이전지출을 가처분 소득 산출 과정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점으로 인해 2017년 전후로 지니계수 및 소득분배지표에 불연속 구간이 생기게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7차 OECD 소득분배지표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일관된 정의로 소득분배지표를 재산출하여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KOS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순자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거주 주택 외 부동산 자산 등에 대한 불평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1〉 7차 OECD 소득분배지표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득산출 변경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2017년 전	근로 + 재산 + 사업 + 사적이전소득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2017년 후	근로 + 재산 + 사업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상동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측정하고자 7차 OECD 소득분배지표 지침, UN의 Canberra Handbook, 그리고 Deaton(2018)에서 제시된 소득분배지표 작성 방법을 참고하였다. 위 세 참고자료와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 산출 방식에 따르면 소득 5분위 지표와 지니계수는 각각 다음의 과정을 거쳐 구해질 수 있다.

소득 5분위: 소득 5분위는 가구 단위의 소득 데이터를 낮은 순으로 정렬시킨 후, 가구 가중치의 누적합과 그 비중으로 산출된다. 즉, 소득 X_i 가 각각 $X_{(1)} \leq X_{(2)} \leq \dots \leq X_{(n)}$ 를 만족하도록 정렬된 후, 정렬된 각 가구에 대한 가중치 $w_{(k)} = w(X_{(k)})$ 의 누적 비중 $p_{(k)} = \sum_{(i)}^{(k)} w_{(i)} / \sum_i^n w_i$ 을 기반으로 소득분위가 분류된다. 이때, 소득 분위 I 는 아래 식 (2)과 같이 정의된다.

$$I_{(i)} = \begin{cases} 1, & p_{(i)} \leq 0.2 \\ 2, & 0.2 < p_{(i)} \leq 0.4 \\ 3, & 0.4 < p_{(i)} \leq 0.6 \\ 4, & 0.6 < p_{(i)} \leq 0.8 \\ 5, & 0.8 < p_{(i)} \end{cases} \quad (2)$$

지니계수: 한편 지니계수의 산출 절차는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치분소득을 활용하며, <표 1>에서 정의된 가치분 소득은 식 (3)과 (4)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이때 LI_i 는 근로소득, AI_i 는 재산소득, SI_i 는 사업소득, PTI_i 과 PTE_i 는 각각 사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지출, $PuTI_i$ 과 $PuTE_i$ 는 각각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을 의미하며, 이를 활용하여 시장소득(MI_i)과 가치분소득(DI_i)을 구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시장소득이 음수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엔 시장소득을 0의 값으로 재조정한다. 뒤 식 (4)의 가치분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식 (4)에서 가치분소득이 음수로 나오면 동일하게 이를 0의 값으로 재조정한다. 소득 지니계수는 가치분소득이 아닌 식 (5)와 같이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치분소득(EDI_i)을 사용하여 구해진다. 이때 n_i 는 가구 i 의 구성원 수를 지칭한다.

$$MI_i = LI_i + AI_i + SI_i + PTI_i - PTE_i \quad (3)$$

$$DI_i = MI_i + PuTI_i - PuTE_i \quad (4)$$

$$EDI_i = DI_i / \sqrt{n_i} \quad (5)$$

지니계수는 소득이 완전히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완전균등선(line of perfect equality)과 소득·부의 누적 비율을 나타낸 로렌츠 곡선(Lorenz curve) 사이의 넓이로 정의된다. 7차 OECD 소득분배지표 지침과 Canberra Handbook, Deaton(2018)에서는 지니계수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통계청은 이들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통계청은 로렌츠 곡선 아래의 면적을 사다리꼴 형태의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 후 이를 기반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하는데, 그 과정은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때 n 은 표본에 포함된 가구의 수를 의미하는 한편, w_i 와 y_i 는 지니계수가 목표하는 것이 소득인지 자산인지에 따라 달리 정의된다.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에서는 w_i 와 y_i 가 각각 가구원 수와 가구 가중치의 곱(인구가중치)의 누적 비율, 인구가중치와 균등화 가치분소득의 곱에 대한 누적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자산 불평등에 대한 지니계수에서 이들은 각각 가구 가중치의 누적 비율, 가구 가중치와 자산의 곱의 누적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누적 비율은 소득 5분위 계산 과정에서 가구소득을 정렬한 것과 같이, 균등화 가치분소득을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정렬한 후에 누적 합을 하는 과정을 거쳐 구해진다.

$$Gini = 1 - \sum_{i=1}^{n-1} (y_{i+1} + y_i) \times (w_{i+1} - w_i) \quad (6)$$

2) 교육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부족한 자원 대신 주요한 발전의 주동력으로 인식되어 왔다(여유진 외, 2007). 교육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여러 사교육 지표들을 통하여서도 살펴볼 수 있다.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주 평균 3.6시간으로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높으며, 초중고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 역시 32만 원으로 2007년 이후 30만 원대를 처음으로 돌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유진성, 2021). 이러한 사교육비 격차는 학술적으로도 학력 격차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교육 불평등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여유진 외,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도 사교육 관련 요인들을 통해 교육 불평등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서는 교육부의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를 활용하였다. 사교육비 지출의 경향성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는 일반교과, 예체능 및 취미·교양, 그리고 취업 관련 사교육으로 구분된 가구별 지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²⁾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는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2016년에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학부모와 담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교육 및 성적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하고 있다.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는 매년 연 2회, 총화 이단계 집락추출법을 활용하여 2021년에는 전국 3,013개 학교, 3,011개 학급의 학부모 약 8만 명을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주로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제2외국어, 한문, 논술 등), 예체능·취미·교양(음악, 미술, 체육, 취미, 교양) 그리고 취업 관련(대학 진학 목적 외 취업 목적 교육 및 자격증 관련) 사교육 비용, 시간, 목적, 참여 유형 등이다. 분석에서는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월평균 사교육비, 주 평균 사교육 시간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및 사교육 시간의 차이와 성적 비중의 차이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는 첫 실시 이후 많은 변화 과정을 거쳤다.³⁾ 주요한 변

2) 교육 불평등에 관련한 대체 자료로 한국교육종단연구와 한국교육고용패널 등도 있으나, 이들 패널 데이터로는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 불평등 추세를 살펴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횡단데이터인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를 활용하였다.

3) 2010년에 조사를 시험 도입하여 점점 비중을 넓히다 2013년부터 인터넷 전면 조사를 실시

화로 2017년부터 월 가구소득 집계 구간을 변경하였고, 2018년부터 담임 교사 성적 조사 방식을 변경하여 고등학교의 학급 내 성적을 집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구소득 집계 구간과 성적의 조사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소득을 재코딩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성적이 주된 관심사가 되는 고등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 가구소득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및 주 평균 사교육 시간, (2) 가구소득과 성적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및 주 평균 사교육 시간, (3) 가구소득에 따른 학급 내 성적 비율 및 배율을 살펴보았다.

3) 고용

노동시장에서 양극화나 불평등은 노동력의 이동을 저해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이거나 소득과 소비지출의 불균형 등을 일으킬 수 있다(윤윤규 외, 2020).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다양한 측면(산업, 기업 규모, 고용형태별 등)에서 존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 불평등에 주목하였다. 임금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고용형태부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매년 표본사업체 약 30,000~33,000개소(약 100만 명 내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자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구분하고, 이들의 근로시간과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파악하여 노동정책의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0). 또한, 매년 6월 급여 계산 기간을 기점으로 연간 1회 조사가 이루어지며, 국제기관, 가사서비스업, 공공행정을 제외한 전 산업 가운데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⁴⁾ 사업체 및 동 사업체에 종사하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용노동부, 2020). 본 연구는 이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특히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고 있어 임금 격차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고용노동부, 2020), 임금구조 부문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통합된 2008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산출할 수 있는 시간당 임금은 월 임금 총액을 월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고용 불평등의 핵심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월

하였고, 2015년에 사교육의식조사와 통합되었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 제공의 방법이나 노무 제공 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자”로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 기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등이 해당된다(고용노동부, 2022:8).

임금 총액에는 정액 급여와 초과급여, 그리고 전년도 연간 특별급여를 12개월⁵⁾로 나눈 임금이 포함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부분 근로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시간당 임금 정의에서는 제외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2:14).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시간당 임금 정의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다만 시간당 임금의 계산에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반영하여 물가 조정을 한 뒤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또한 앞서 논의와 같이 고용이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1) 교육 수준에 따른 시간당 임금(원)과 고용 불평등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 지표로서 (2) 대학원졸/중졸이하 시간당 임금(원) 배율을 살펴보았다. 그 밖에도, (3) 교육 수준별 정규직-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격차(원)와 (4) 교육 수준에 따른 정규직 비율(%)을 측정하였다.

4) 건강

건강은 행복한 삶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며, 건강 불평등은 흔히 삶에 있어 개인적 요인 보다는 구조적 차이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김동진 외, 2013). 이에 본 연구는 건강 불평등이 주로 관찰되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건강과 관련한 지표들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전국 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로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현재까지 매년⁶⁾ 실시되고 있으며, 보건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국민의 건강 수준, 만성질환 유병현황,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추출틀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본 추출틀로 활용하며, 만 1세 이상 국민에 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도록 설계되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표본설계로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설계를 이용하며, 자료 분석시에 분산추정층, 집락, 가중치 등의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ing)을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이에 본 분석에서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복

-
- 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경우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연간 특별급여를 조사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뒤에 당해연도의 6월 임금 총액에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0).
- 6) 제1기인 1998년부터 제3기 2005년까지는 3년 주기로 실시되었고, 이후 제4기(2007-2009)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다만, 2007년은 연중 하반기만 조사되었으며, 연간 조사는 2008년 이후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연간 조사가 시행된 2008년을 기점으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합표본설계 요소(층, 집락, 가중치)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시기의 경우 연간 조사가 시작된 제4기 2차 연도(2008년)부터 제8기 3차 연도(2021년도)까지 추이를 위주로 건강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건강 불평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 주관적 건강 인지율의 소득 5분위 배율과 객관적인 만성질환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2) 주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평균 유병률, 그리고 주요 건강 불평등 지표로서 (3) 주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치료율의 평균 소득 5분위 배율을 산출하였다.⁷⁾

첫 번째 측정지표로서 주관적 건강 인지는 평소에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 수준으로 ‘모름’과 ‘무응답’은 제외한 상태에서 ‘매우 좋음’과 ‘좋음’에 응답한 비율로 측정하였다. 이후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주관적 건강인지를 값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그룹의 지렛값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두 번째 지표인 주요 만성질환 평균 유병률은 질병관리청(2023)에서 제시하는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첫 번째, 고혈압 유병률은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다만, 고혈압 유병률의 경우 2008~2010년에 질병관리청(2023)의 가이드에 따라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은 측정혈압이 아닌 보정혈압 변수를 통해 산출하였다. 두 번째, 당뇨병 유병률은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당뇨병 유병률의 경우 2019년 당화혈색소 검사가 유병률 기준에 포함되었으나, 1998~2010년의 경우 일부 대상자(당뇨병 유병자)만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행하여 당화혈색소를 추가한 유병률을 기준으로 분석하려면 2011년 이후부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른 건강 불평등 지표의 추세와 같은 2008~2021년도의 기간을 맞추기 위해 당화혈색소를 당뇨병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기존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마지막 만성질환으로서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 강하제를 복용한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이후 최종 단계에서는 세 만성질환의 평균 유병률 값을 산출하여 나타내었다.

건강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서 만성질환 치료율의 경우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하여서 ‘현재 앓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와 ‘해당

7) 건강 부문의 소득수준을 나누는 기준의 경우 앞서 소득 부문의 가구소득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2008년~2016년은 가계동향조사의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2017년 이후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월 가구 경상소득 5분위’를 산출하였다.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문항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각 만성질환에 '앓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만 추출하였으며, 그 가운데 치료와 관련하여 '해당되지 않거나(청소년, 소아, 의사진단 받지 않음)', '모름' 및 '무응답'은 제외한 뒤, 치료 여부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후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세 가지 만성질환의 치료율 수준을 산출하여, 평균 가구소득 5분위 배율로 건강 불평등을 나타내었다.

한편 모든 분석에 있어서는 설문 항목의 분석에 각각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동시에 특정 조사항목에 대해 결측인 자료의 표본설계정보가 누락되어 추정치의 분산추정량에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SAS의 NOMCAR(Not missing completely at random)옵션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마지막으로 분석 기간 동안 참여한 노년층의 표본 수의 경우 제4기(2008~2009)의 총 3,202명, 제5기(2010~2012)의 총 4,557명, 제6기(2013~2015)의 총 4,340명, 제7기(2016~2018)의 총 4,804명, 제8기(2019~2021)의 총 5,170명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건강 불평등 각 지표에 해당하는 노인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변수에 따라 노년층의 표본 수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Ⅲ. 우리나라의 불평등 분석

1. 분야별 불평등 추이

1) 소득 및 자산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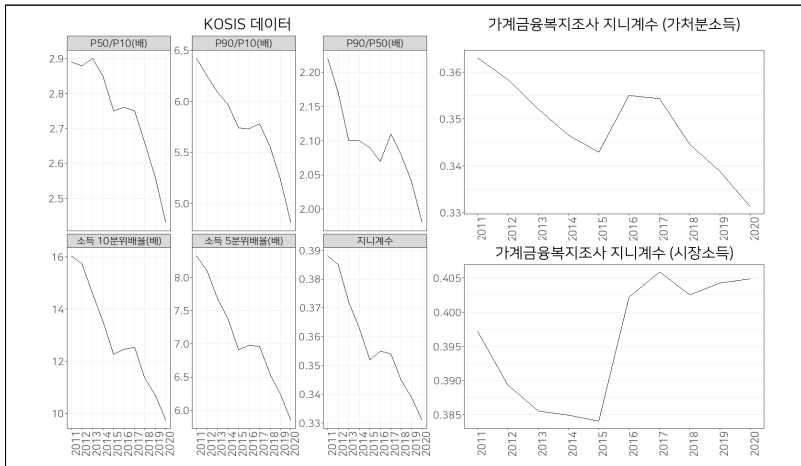
소득과 자산은 불평등 논의의 핵심으로 다른 영역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킹핀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림 3>은 지니계수를 비롯하여 소득 불평등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여러 지표의 추이를 도식화 한 것이다. 좌측은 KOSIS에서 추출한 다양한 소득 불평등 지표들이고, 우측은 원시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부터 새롭게 산출한 소득 지니계수이다. KOSIS 데이터에 대한 도식에서 왼쪽 위부터 P50/P10, P90/P10, P90/P50, 소득 10분위 배율($= \frac{\text{소득 상위 10\%}}{\text{소득 하위 10\%}}$), 소득 5분위 배율($= \frac{\text{소득 상위 20\%}}{\text{소득 하위 20\%}}$), 그리고 지니계수의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P90, P50, P10은 각각 9분위의 상한값(10분위와 9분위의 경계값), 중위소득, 1분위의 상한값(1분위와 2분위의 경계값)을 의미한다. KOSIS 기반 소득 불평등 지표들의 전반적인 추세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

이는데, 2015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7년까지 소폭 반등한 이후로 재차 하향세로 전환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처분소득을 기반으로 한 소득 불평등 지표의 움직임은 이와 비슷하는데, 2017년 이후 소득분배지표 산출 과정 및 데이터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OECD 사회복지 지출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해왔는데(OECD Data Explorer, 2023.12.30.), 소득 분배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조세 부담률 역시 매년 증가했으며(재정경제통계시스템, 2023.12.30.), 이 역시 일차적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과 여러 학자가 경고하고 있듯 2017년 전후로 지니계수를 비롯한 여러 소득 불평등 지표는 서로 비교할 수 없으나, 이의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것에 한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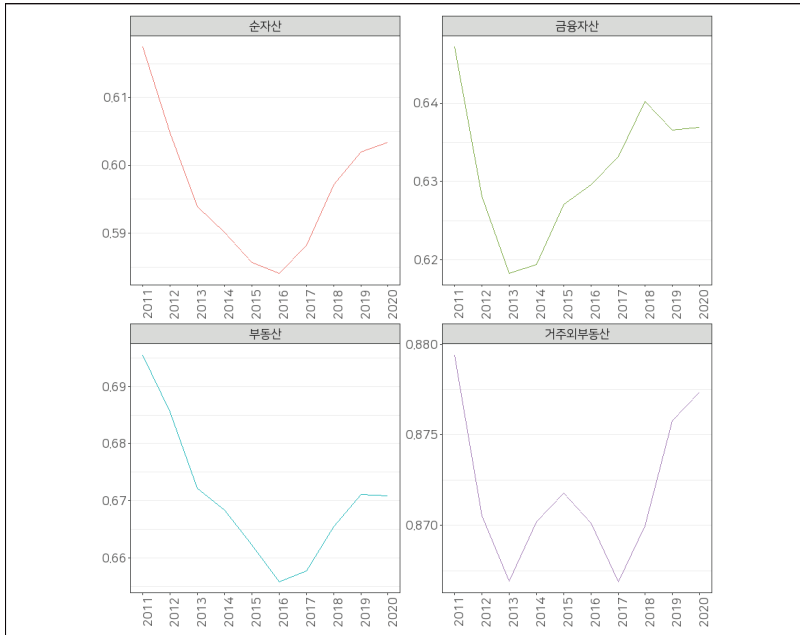
다만, 시장소득을 기반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하였을 때는 가처분소득과 달리 2015년 이후로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장소득 기준 시장의 일차적인 분배가 더욱 불평등하게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소득재분배 과정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시장의 자원분배에 대한 고찰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3〉 소득 불평등



출처: KOSIS 소득분배지표(2011~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시자료(2011~2020)

〈그림 4〉 자산 불평등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시자료(2011-2020)

한편 〈그림 4〉는 자산에 대한 지니계수를 도식화한 것으로, 자산 불평등은 앞선 소득 불평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던 소득 불평등의 경우 모두 일시적인 반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인 하향세는 유지되었던 반면, 자산 불평등은 다른 추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순자산, 즉 자산⁸⁾과 부채⁹⁾의 차이를 살펴본 지니계수는 2016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 이후 증가하는 한편, 금융자산은 2013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도 불평등 수준이 2016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으나¹⁰⁾ 이후 상승하였고, 보다 핵심적인 거주 주

8) 금융자산(적립·예치식 저축, 주식, 펀드, 현 거주지 전월세 보증금 등)과 실물자산(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액, 자동차 등)

9) 금융부채(부동산 및 거주 주택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대출, 외상 및 할부 미상환액 등) 및 임대보증금

10) 부동산 부문에서 불평등이 완화된 주요 원인으로는 2008년 경제 침체 이후 부동산 매매가가 꾸준히 감소하였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따라 불평등 지표가 다소 감소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 3구와 서울시 내의 부동산 가격이 감소하였다가

택을 제외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불평등은 W자 형태로 나타나며 완화와 악화를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자산에 대한 데이터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유사하게 최근에 불평등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불평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소득보다는 자산의 불평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교육 불평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 교육 불평등의 핵심은 사교육 격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결국 소득 불평등과 맞물려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일반교과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예체능 및 취미·교양, 취업에 대한 사교육은 일반교과목에 비해 사교육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성적과 큰 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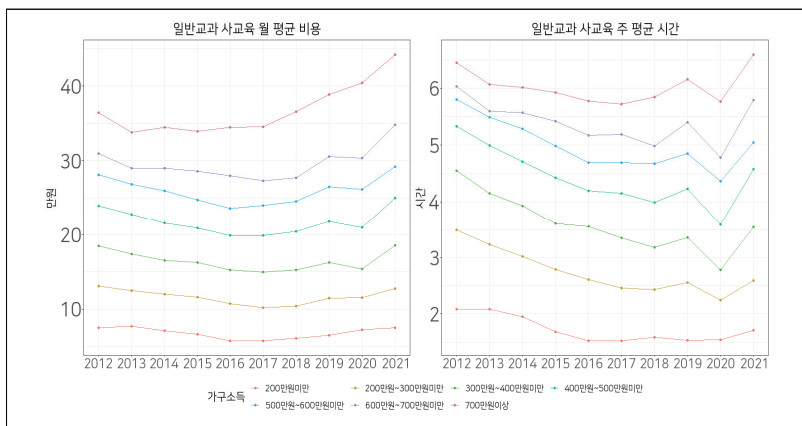
먼저 가구소득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및 주 평균 사교육 시간 추세는 <그림 5>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5>는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준다. 첫째, 가구소득과 사교육비 및 사교육 시간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반교과목에 대한 사교육 투자는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결국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의 경우 소득 하위 집단에서는 지난 10년간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어 온 반면 소득 상위 집단에서는 최근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 최상위권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셋째, 한편 사교육 평균 시간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모든 소득수준에서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와 사교육 시간 모두 2020년 이후 갑자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해 높아진 사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사교육비와 사교육 시간 증가의 기울기는 소득이 높을수록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 상황이 교육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그림 5>는 교육 불평등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대학입시와 관련된 고등학교 뿐 아니라 그보다 관련이 덜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 결과라는 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다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2023.12.30.).

에서 한계를 갖는다. 더 나아가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는 고등학교를 일반고 계열¹¹⁾과 특성화고 계열¹²⁾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림 5>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대학 진학이 아니라 취업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교육비 지출의 패턴이 전혀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사교육 투자의 패턴은 성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림 5>는 성적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에 <그림 6>에서는 일반고 계열 학생들의 일반교과목 사교육 투자만을 중심으로 학급 내 성적에 따른 도식화를 시도하였다.¹³⁾

〈그림 5〉 가구소득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및 주 평균 사교육 시간



출처: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원시자료(2012~2021)

<그림 6>에서 나타난 사교육비와 사교육 시간의 추세에서도 <그림 5>와 유사하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투자가 더욱 커지는 경향성이 발견된다. 특히 <그림 6>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점은 소득이 높고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사교육 투자의 변화 폭 또한 크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소득 하위권과 상위권의 사교육 투자 격차는 성적 상위권으로 갈수록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그림 6>에서 상위권(~상위 10%)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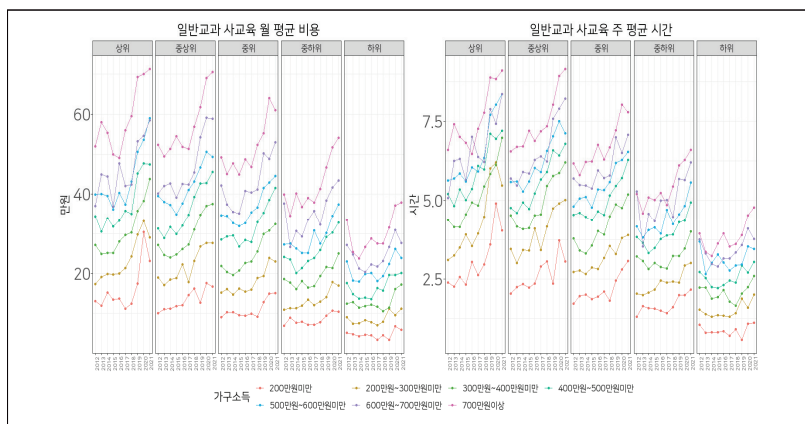
11) 종합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외국어고

12) 마이스터고, 공업고, 농업고, 상업고, 수산고, 실업고, 대안교육 및 가사고 등

13) 특성화고 계열의 학생들을 <그림 6>에서 제외한 다른 이유로는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나타나는 특성화고의 일반교과목에 대한 사교육비 투자의 추세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이나 가구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및 사교육 시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서 중하위권(상위 61%~80%)까지 학생들의 경우엔 정도는 다르지만, 2021년까지 각각 사교육 투자 비용 및 시간이 상당히 증가하는 반면, 하위권(상위 81%~100%)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 투자에 크게 변화가 없거나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대입이 가시권에 있는 중하위권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투자하는 자원은 더욱 커지는 한편, 하위권에 속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기반으로 한 경쟁에서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급 내 성적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집계됨은 결국 상위권은 정해진 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더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한편 경쟁에서 이탈하는 인원 또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그림 5>와 <그림 6>으로부터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사교육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6〉 가구소득과 성적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및 주 평균 사교육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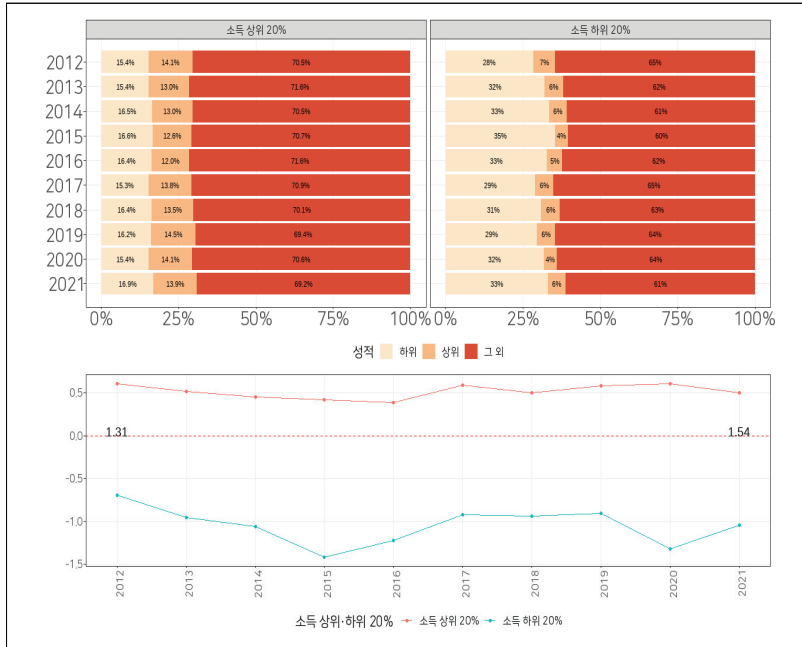


출처: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원시자료(2012~2021)

마지막으로 교육 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 <그림 7>과 같이 가구소득에 따른 학급 내 성적 비율 및 배울 추세를 살펴보았다.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의 경우 정확한 가구소득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소득분위에서 가장 가까운 값을 기반으로 가구소득 5분위를 할당하였다. 이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2017년의 소득분위 산정기준 데이터의 변경을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할당하였다. <그림 7>에 의하면 소득 상위 20% 집단의 경우 성적 상위 비중이 12%에서 14%지만 소득 하위 20% 집단의 경우 성적 상위 비중이 4%에서

7%에 그쳐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성적 하위 비중도 소득 상위 20% 집단에선 15%에서 16%로 유지됐지만, 소득 하위 20% 집단에선 28%에서 33%로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에 따른 성적분포가 뚜렷하게 차별화됨을 잘 보여준다.

〈그림 7〉 가구소득에 따른 학급 내 성적 비율 및 배율



출처: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원시자료(2012~2021)

한편, 소득분위 내 성적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로그 배율¹⁴⁾을 통하여서도 살펴봤다. 〈그림 7〉의 아래 그래프에서는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내에서의 추세는 전반적으로는 유사해 보이나, 소득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격차가 2012년의 1.31에서 2021년에는 1.54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¹⁵⁾ 2017년에는 각 집단에서의

14)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계산하였다($=\log \frac{2 \times \text{성적 상위권 학생 비율}}{\text{성적 하위권 학생 비율}}$).

15) 소득분위별 성적분포의 로그 배율 계산에서 성적 상위 학생 비율에 “2”가 곱해진 이유는 원 자료에서 성적분포의 정의가 상위권은 상위 10% 하위권은 하위 20%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래프에서 ‘0’은 상위권과 하위권의 성적분포가 동일함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그림 7〉을 통해 소득 상위 집단에서는 성적 상위권 비율이 소득 하위 집단에서는 성적 하위

로그 배율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소득분위 산정기준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는 기준 데이터 변경 이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고용 불평등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면, 교육격차는 고용(일자리)격차와 관련이 깊다. 교육 수준과 고용 간의 관계는 흔히 교육에 따른 임금 수준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8>은 생애주기에 걸쳐 가장 집중적으로 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청장년층(만 19세~64세)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준에 따른 시간당 임금(원)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8>을 보면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시간당 임금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¹⁶⁾ 특히 교육 수준에 따른 시간당 임금은 대학, 대학원졸 이상 집단에서 크게 늘어난다.

<그림 8>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용 불평등의 핵심 지표로서 학력 차이에 따른 임금 배율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9>는 대학원졸/중졸이하 시간당 임금의 배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2008년(3.28) 대비 2021년(2.55)도에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에 비해 2021년 중졸이하와 대학원졸의 시간당 임금 증가가 각각 3,932원과 3,027원으로 임금 상승액의 절대적 크기는 비슷하지만, 증가율(2008년 대비 2021년도)의 경우 중졸이하가 40.89%, 대학원졸 이상이 9.59%로 중졸이하가 더 크다. 즉 시간당 임금의 증가율이라는 측면에서는 교육격차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감소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청장년층에서 전체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교육 수준에 따른 시간당 임금 격차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정규직의 경우 <그림 8>의 전체근로자 시간당 임금의 평균값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며,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시간당 임금이 커지는 양상도 동일하게 나타났다.¹⁷⁾ 한편, 2008년부터 2021년 동안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평균은 11,979원으로¹⁸⁾ 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평균 시간당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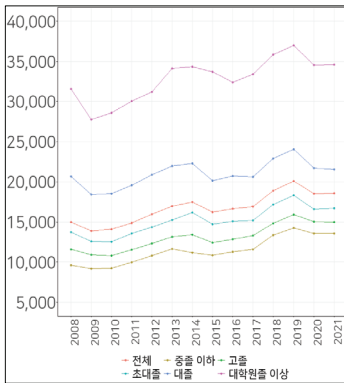
권 배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2008년부터 2021년 동안의 전체근로자 평균 시간당 임금은 16,721원으로 임금 수준을 교육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중졸이하(11,428원), 고졸(13,074원), 초대졸(15,131원), 대졸(20,998원), 대학원졸 이상(32,788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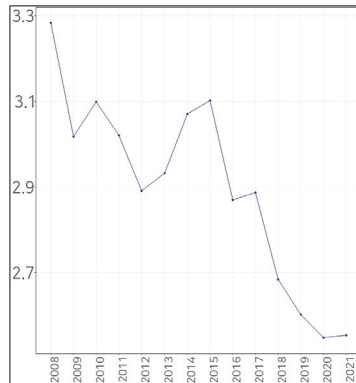
17) 2008년부터 2021년 동안의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8,134원이며,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12,458원, 고졸 14,152원, 초대졸 15,866원, 대졸 21,914원, 대학원졸 33,102원으로 나타났다.

인 18,134원보다 약 6,155원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8〉 청장년 전체근로자 기준
교육 수준에 따른 시간당 임금(원)



〈그림 9〉 청장년 전체근로자
대학원졸/중졸이하 시간당 임금(원) 배율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형태 부문 원시자료(2008~2021)

이러한 정규직-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원) 격차를 〈그림 10〉을 통해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관찰된다. 우선 전체 기간(2008년~2021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시간당 임금의 평균값 차이는 대졸(7,884원), 초대졸(4,962원), 고졸(3,373원), 중졸이하(2,225원)로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동 기간 동안 시간당 임금 격차의 추세는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졸 이상의 경우엔 정규직-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차이의 추세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은 편으로 해석의 주의를 요한다.

고용 불평등의 마지막 지표로 〈그림 11〉은 교육 수준에 따른 정규직 비율¹⁹⁾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시간당 임금 분석의 경우 비정규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하였지만, 정규직 비율 분석에서는 정규직과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였다. 2008년부터 2021년도까지 평균 정규직 비율은 73.32%로 대졸의 정규직 비율(84.32%)이 가장 높았으며, 초대졸(82.01%), 대학원졸 이상(81.95%) 그룹에서 80% 정도의 정규직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은 63.61%로 전체 평균인 73.32%보다 낮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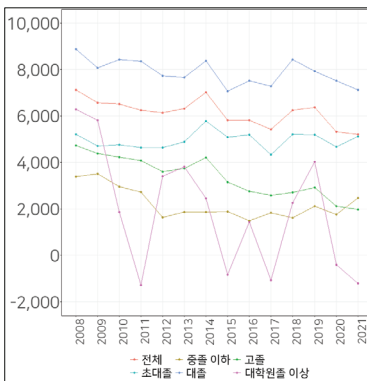
18) 2008년부터 2021년 동안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교육 수준별로 보면 대학원졸이 31,20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14,029원), 초대졸(10,903원), 고졸(10,778원), 중졸이하(10,232원) 순으로 나타났다.

19) 고용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들의 경우 가중치를 모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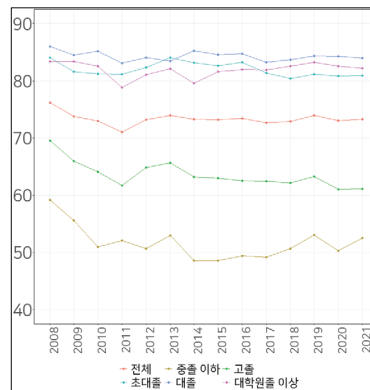
며, 증졸이하는 51.7%로 가장 낮았다. 또한, 2008년 대비 2021년도의 전체 정규직 비율은 2.89%p 감소하였으며, 변동 폭이 큰 교육집단은 고졸(-8.43%p), 증졸이하(-6.62%p), 초대졸(-3.15%p), 대졸(-1.96%p), 대학원졸 이상(-1.16%p) 등 주로 학력이 낮은 고졸과 증졸이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나 정규직 비율 차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존재하였으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경향성을 볼 수 있다. 다만, 시계열자료에서 나타난 추세에 따르면 앞서 대학원졸/증졸이하 시간당 임금의 배율이 감소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격차에 따른 고용 불평등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0〉 청장년층 교육 수준별
정규직-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격차(원)



〈그림 11〉 청장년층 교육 수준에 따른
정규직 비율(%)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형태 부문 원시자료(200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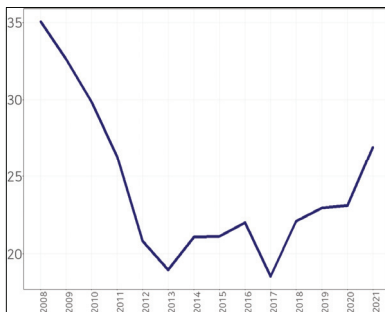
4) 건강 불평등

청소년기의 교육 불평등에서 시작된 격차는 청장년기의 고용 불평등을 거쳐 노년기의 건강 불평등까지 생애주기에 걸쳐 이어진다. 다만 한 개인의 청장년기 고용(정규직 여부)²⁰⁾과 노년기 건강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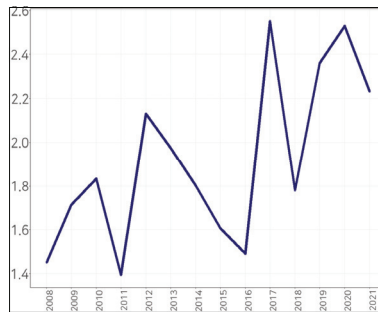
20) 앞서 고용 불평등에서 다뤘듯이 고용에서 중요한 지표인 정규직 여부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현재 취업자를 대상으로 묻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현재 취업자에 대한 연도별 표본 수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노년층의 청장년기 고용을 짐작할 수 있는 최장일자리에 관한 문항들이 있었지만, 정규직 여부 문항이 포함되

고용과 직접 연관된 소득수준과 노년기 건강 격차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건강 상태의 평가를 위해선 주관적 건강 수준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건강 불평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흔히 활용된다(Ovaska & Takashima, 2010). <그림 12>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노년층(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008년~2021년 동안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추이를 살펴보면 ‘매우 좋음’과 ‘ 좋음’에 응답한(즉 건강이 양호한) 비율이 2008년에서 2017년까지는 대체로 감소하였지만, 그 이후로 최근까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건강 불평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노년층 건강 인지율의 소득 5분위 배율을 나타내는 <그림 13>을 보면, 2008년 1.44에서 2021년 2.23으로 지난 10여년간 소득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수준의 차이가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¹⁾

〈그림 12〉 노년층 주관적
건강 인지율(%)



〈그림 13〉 노년층 주관적 건강 인지율
소득 5분위 배율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2008-2021)

다음은 보다 객관적으로 건강 불평등을 평가하기 위해 노년층의 만성질환 유병률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14>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의 평균 유병률을 나타낸 것이다.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은 2008년 30.11%에서 2021년 42.85%로 약 12.74%p 증가하여 객관적인 건강 수준이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²²⁾ 하지만 이 부분은 소득의 증가와 함께 정기적인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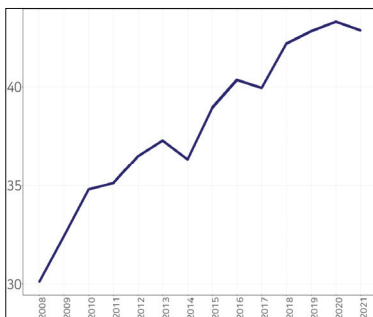
어 있지 않았다.

21) 2008~2021년간 가구소득 1분위의 평균 건강 인지율은 19.99%였으며, 5분위는 37.24%로 14년 동안 5분위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1분위보다 대략 17.25%p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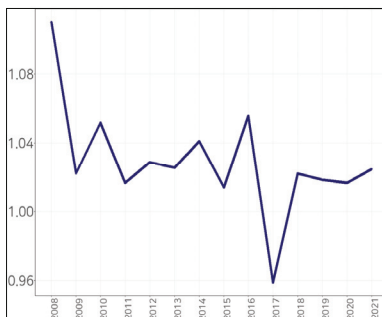
22) 만성질환별로 유병률 증가 폭을 살펴보면 만성질환 가운데 고콜레스테롤혈증에서 가장 많이

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숨겨져 있던 만성질환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한편 〈그림 15〉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치료 여부를 ‘있음’으로 답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 5분위 배율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15〉를 보면 치료율의 소득 5분위 배율 추이가 지난 10여 년간 감소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만성질환의 치료에 있어 소득수준 간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 지난 10여 년간 노년층의 건강 불평등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뜻한다.

〈그림 14〉 노년층 주요 만성질환
평균 유병률(%)



〈그림 15〉 노년층 주요 만성질환 치료율
평균 소득 5분위 배율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2008-2021)

2.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탐색적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각 영역에서의 불평등이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는 1차 연도(1998년)를 시작으로 24차 연도(2021년)까지 이루어졌다. 시기가 길어지는 만큼 12차 연도(2009년), 21차 연도(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 표본추가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21차 연도(2018년)에는 약 20년 동안의 탈락한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기존의 7,090가구에 더해 5,044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혈압은 2008년(54.99%)에서 2021년(62.29%)으로 7.3%p 증가하였으며, 당뇨병은 2008년(19.11%)에서 2021년(27.26%)으로 8.15%p 증가, 고콜레스테롤혈증은 2008년(16.23%)에서 2021년도 39%로 약 22.78%p가 증가하였다.

구를 추가로 표집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5,044가구 및 가구원이라는 상당히 표본추가가 이루어진 2018년도를 기점으로 이후 4년 동안 새로운 표본을 취합하여 생애주기별 불평등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정하고자 하였다.²³⁾

생애주기별 불평등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는 교육 불평등(대학 이상 교육 여부), 고용 불평등(정규직 여부), 건강 불평등(주관적 건강 여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 불평등 모형에서는 가구소득 격차가 대학 이상 교육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고, 고용 불평등 모형에서는 교육격차가 중장년기의 정규직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건강 불평등 모형에서는 중장년기의 고용격차가 노년기의 주관적 건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각 모형에서의 표본 수는 1,782명, 9,722명, 4,893명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그림 2>에서 보여 준 생애주기에 따른 불평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층²⁴⁾, 청장년층, 노년층을 각각 만 18세~25세, 만 19세~64세, 만 65세~75세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다만, 노동패널 조사는 패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응답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의 변화를 감안하기 위해 표본이 새롭게 추가된 2018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연도의 추가된 표본들을 덧붙이거나 주된 종속변수(e.g. 교육 수준, 고용상태 등)의 값이 바뀌었을 경우 변화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한 학생이 201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였다면, 주된 종속변수의 변화 시점인 2019년의 응답만을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 기간 동안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추출한 소득분위로 각 가구의 소득분위를 구분하였다. 특히 고용형태(정규직 vs. 비정규직)는 지속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의 고용형태를 살펴볼 때 근무하였던 기간이 더욱 길었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정규직 여부를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10년 중 7년을 정규직, 3년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던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였으며, 정규직 3년, 비정규직 1년으로 근무한 사람과 같이 전체 근무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

23) 본 연구의 분석은 패널분석이 아닌 횡단면 분석으로 수행되었다. 추가된 표본들을 제외한 뒤에 시계열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5,044가구 및 가구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조사 대상자가 2018년에 표집 됨에 따라 보다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도 청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추적 연구를 하기에 표본이 단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횡단면 분석을 진행하였다.

24) 앞서 교육 불평등 추이 분석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형 1의 경우 가구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측면의 성과(4년제 대학 입학)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는 나이인 만 18세~2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교육 수준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그룹과 4년제 이상 대학교의 재학생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육 수준의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2년제 전문대학생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는 경우 또한 정규직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고용 경험이 없었던 응답자는 분석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다음 <표 2>는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불평등, 고용 불평등, 건강 불평등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모형엔 성별과 나이, 그리고 소득분위가 공통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소득분위의 경우 1분위를 준거집단으로 두고 2분위부터 10분위까지 9개의 더미를 만들어 모든 모형에 포함하였으나, <표 2>에는 1분위 대비 10분위 더미만 소득분위로 나타내었다. 먼저 모형 1의 교육 불평등은 종속변수로 학력이 4년제 대학 이상인 그룹을 1로, 그 이하는 0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표 2>의 모형 1을 살펴보면, $pseudo R^2$ 는 McFadden 기준으로 0.079로 나타났으며,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인 소득분위의 경우 교육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분위가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소득 10분위가 1분위에 비해 4년제 대학 이상일 승산비(odds ratio)가 6.15배인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4년제 이상 대학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월등히 커짐을 의미한다. 이는 <표 3>의 예측확률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소득 1분위와 10분위 집단이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을 확률이 각각 51%, 87%로 약 1.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앞 절의 분석에서 살펴본 가구소득과 사교육 투자 간의 관계와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 수준은 이후 청장년기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형 2는 교육 수준과 고용 불평등 간의 관계를 탐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다. 모형 2의 고용 불평등 분석에서는 정규직 여부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추정 결과 $pseudo R^2$ 는 McFadden 기준으로 0.091로 확인되었다. 모형 2에서 4년제 대학 이상 교육은 고용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집단은 교육 수준이 그보다 낮은 집단에 비해 정규직이 될 승산이 2.5배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를 <표 3>의 예측확률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고졸 이하와 4년제 대학 이상일 때 정규직으로 일할 확률이 각각 37%, 59%로 약 1.5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장년기에 어떠한 고용형태로(정규직 vs. 비정규직) 일했는지는 이후 노년기의 건강 수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형 3은 주관적 건강 인지를 바탕으로 한 건강 불평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며, 추정 결과 $pseudo R^2$ 는 McFadden 기준으로 0.052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주관적 건강 인지에는 청장년 시기에 정규직으로 일했는지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장년기에 주로 정규직으로 일했던 집단이 비정규직으로 주로 일했던 집단보다 건강하

다고 인식하는 승산이 1.6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비정규직 집단과 정규직 집단이 건강하다고 인식할 확률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비정규직 집단이 건강하다고 인식할 확률은 30%임에 비해, 정규직 집단은 41%로 비정규직 집단보다 약 1.36배 높았다.

〈표 2〉 불평등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교육 불평등 (대학 교육 이상)		모형 2: 고용 불평등 (정규직 여부)		모형 3: 건강 불평등 (주관적 건강 인지)	
	B	Odds Ratio	B	Odds Ratio	B	Odds Ratio
상수	-3.23*** (0.747)	0.039	-1.58*** (0.132)	0.206	1.35 (1.07)	3.86
여성	0.395*** (0.117)	1.48	-0.412*** (0.044)	0.662	-0.371*** (0.097)	0.69
나이	0.157*** (0.032)	1.17	0.013*** (0.002)	1.01	-0.042*** (0.015)	0.959
소득분위	1.82*** (0.369)	6.15	1.21*** (0.127)	3.37	1.20*** (0.309)	3.30
대학 이상			0.917*** (0.048)	2.50		
정규직 여부					0.48*** (0.132)	1.62
N	1,782		9,722		4,893	
χ^2	156.75***		1223.9***		142.52***	
AIC	1863.68		12276.48		2647.65	
BIC	1929.507		12369.85		2722.13	
<i>pseudo R</i> ²	0.079 (McFadden)		0.091 (McFadden)		0.052 (McFadden)	
	0.085 (Cox & Snell)		0.118 (Cox & Snell)		0.029 (Cox & Snell)	

주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주2) * $p < 0.05$, ** $p < 0.01$, *** $p < 0.001$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탐색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표 2>와 <표 3>은 생애주기에 따라 불평등의 양태가 교육, 고용, 건강으로 나타나고, 청소년기의 불평등이 청장년기와 노년기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다만 이와 같은 구조적 불평등 문제의 원인과 양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추후 좀 더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표 3〉 주요 불평등별 예측확률

모형 1: 교육 불평등		모형 2: 고용 불평등		모형 3: 건강 불평등	
소득분위	대학 이상	교육 수준	정규직	정규직 여부	주관적 건강
1	51%	고졸 이하	37%	비정규직	30%
10	87%	대학 이상	59%	정규직	41%

Ⅳ.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불평등 현상을 생애주기에 맞춰 소득, 교육, 고용, 건강의 네 분야로 나누고 지난 10여 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불평등이 중요한 정책문제라면, 분야별로 불평등이 어떠한 양태를 가지고 나타나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임상과학으로서 근거 기반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정책학의 중요한 책무이다. 본 연구는 다소 파편적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불평등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평등 현상을 생애주기라는 관점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변화 양태를 보여주기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의 주된 내용과 함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분야별 불평등의 경향성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소득, 고용, 건강 등 주요 영역의 핵심 지표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불평등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의 경우엔 고소득층과 성적 상위권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불평등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교육 불평등 현상은 소득 및 성적 상위층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불평등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은 자산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소득과는 뚜렷하게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과 부동산은 워낙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주제이다 보니, 이 두 분야에서의 쏠림과 불평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는 불평등 정책의 초점이 특히 교육과 자산에 맞추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불평등의 정도는 지난 10여 년간 완화되는 추세지만, 생애주기에 걸쳐 여러 분야의 불평등이 얹히고설켜 구조화되는 양태를 보인다는 사실은 불평등이 여전히 매우 중요한 정책문제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저소득층 가구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교육 경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는 청장년기의 고용격차로 이어진다. 고용격차는 다시 가계 소득격차를 만들고, 결국 은퇴 이후 노년기의 건강 격차로까지 이어진다. 생애주기에 걸쳐 이렇게 구조화되는 격차는 인위적으로 끊어주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따라서 청소년기의 격차가 청장년기나 노년기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개입이 요구된다. 즉 향후 불평등 정책은 어떻게 불평등을 줄일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불평등이 생애주기에 걸쳐 여러 분야로 구조화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에 논의의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생애주기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소득격차로 인한 청소년층의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및 경제적 지원, 추가 학습 지원 수업 제공, 디지털 기기 지원 및 디지털 교육 환경 개선, 진로 지원 및 직업 교육 등과 같은 정책의 도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교육격차로 인한 청장년층의 고용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서는 직업 교육 및 기술 향상 프로그램 지원, 고용 기회 균등화를 위한 채용 정책 도입, 교육 수준이 낮은 직종에서의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 보호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격차(고용 불평등 포함)로 인한 노년층의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서는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예방적 건강 케어 서비스 제공, 소득이 낮은 지역의 의료 인프라 강화, 저소득층 대상 보건 보험 혜택 확대, 건강 정보 및 교육을 확대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셋째, 불평등의 구조화를 지양하기 위하여서는 생애주기별 교육 불평등, 고용 불평등, 건강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구조화의 핵심인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분석한 불평등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격차가 생애주기별 불평등에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소득 불평등이 다양한 부문의 불평등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소득의 격차가 심화될수록, 사회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불평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주로 나타나는 교육, 고용, 건강 분야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분석에서 가처분소득 불평등은 2015년 이후 완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매우 약한 편이다. 예를 들어, 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평균 ‘빈곤 탈출률’²⁵⁾은 64.1%인 것에 비해 한국은 19.5%로 28개국

중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정민·민지원, 2018). 저소득층의 소득개선효과 측면에서도 OECD 회원국의 소득개선효과는 62.1%P로 소득이 크게 증대되었지만, 한국은 11.5%P에 불과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정민·민지원, 2018). 최근 국내의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가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재정경제통계시스템, 2023.12.30.; OECD Data Explorer, 2023.12.30.), 여전히 한국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소득 불평등 완화 정책과 함께 자산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산 불평등은 근로소득보다 더 큰 소득의 격차를 야기하고(신광영 외, 2020), 특히 소득이 적은 노년기에 핵심적으로 두드러져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득 불평등보다 좀 더 심각한 불평등이라 볼 수 있다(신광영, 2013).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순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거주 외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 불평등이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순자산의 패턴이 부동산 자산의 패턴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산 불평등 완화와 관련하여서 자산 가격의 안정화, 저자산층의 저축 및 자산 형성 기반의 확충과 동시에 주거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아울러 이루어질 때, 이와 가깝게 연계된 자원의 격차가 더욱 완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득 및 자산 불평등 분석에 활용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한계점이다. 김낙년·김종일(2013), 김낙년(2020), 이원진 외(2019)는 현재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고소득자 표본과 1인 가구 표본이 부족하거나, 근로·금융소득, 부동산 자산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불평등의 추세가 실제보다 과소·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세청의 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서는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김낙년, 2020; 이원진 외, 2019), 이 역시 비표본 오차가 아닌 편향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데이터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해당 조사의 경우 학생의 성적에 대한 설문 문항이 있지만, 언제까지나 학급 내 성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조사되고 있는 성적은 지역적인 차이를 감안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고용 부문에서 대졸자가 더 많아진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졸자 내의 불평등(인서울 vs. 비인서울)이나, 기업 규

25) 빈곤 탈출률은 “시장소득 기준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을 의미한다(정민·민지원, 2018:2).

모별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관적 건강 수준과 객관적 건강 수준 가운데 어떠한 지표가 노년층의 건강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분석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근거로서 만성질환의 치료율을 주요 지표로 살펴해보았지만, 주관적 건강 수준 또한 자신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얼마나 질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불평등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횡단면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데이터 활용 시기로 인해 청소년기-청장년기, 청장년기-노년기로 표본이 분리되더라도 패널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따른 구조화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고용노동부. 202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21년판》, p8, 14.
- 곽재현·홍경완. 2017. “소득에 따른 여가 불평등: 여가시간·지출과 행복의 관계.” 《관광연구》, 32(5): 293-309.
- 구교준. 2009. “임상과학으로서의 행정학.” In 박종민 & 정무권 (Eds.), 《한국행정연구: 도전과 과제》, 397-409. 서울: 박영사.
- 구교준·김희강·최영준·이희철·박일주. 2016.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행정논총》, 54(2): 31-59.
- 김낙년. 2018. “한국의 소득집중도: update 1933-2016.” 《한국경제포럼》, 11(1): 1-32.
- 김낙년. 2020. “가계조사의 행정자료에 의한 보정: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7(1): 39-61.
- 김낙년·김종일. 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19(2): 1-64.
- 김동진·이소영·기명·김명희·김승섭·김유미·윤태호·장숙량·정최경희·채희란·이정아. 2013. 《한국의 건강 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운. 2020. “한국의 생애소득 불평등 원인에 대한 분석.” 《경제학연구》, 68(1): 71-113.
- 김지원·박차눔·구교준·이희철. 2021. “한국의 행복 불평등 분석.” 《행정논총》, 59(1): 115-141.
- 박종규. 2017.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원인 및 정책목표》. KIF 연구보고서, 2017-03.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 방하남·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분석지침서(SAS)》.
- 신광영. 2013.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 신광영·계봉오·신희주·이도훈·이성균·최율·최성수·황선재. 2020. “자산 불평등 자료 분석.”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3: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97-13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1-01.
- 여유진·김수정·구인회·김계연. 2007.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진성. 2021.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KERI Insight.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윤윤규 · 장인성 · 최세림 · 강신혁 · 김현경 · 이아영 · 김예슬 · 김유선 · 윤정향 · 김용하 · 김동배. 2020. 《노동시장 불평등 현황과 대책》.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1-01.
- 이성균 · 신희주 · 김창환. 2020. “한국 사회 가구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경제와 사회》, 가을호: 60-93.
- 이소정 · 정경희 · 손병돈 · 홍백의 · 이미숙 · 이은진. 2008.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우진. 2018.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현황과 과제.” 《정부학연구》, 24(2): 29-59.
- 이원진 · 정해식 · 전지현. 2019.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 · 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주미 · 김태완. 2022. “청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22(3): 8-20.
- 이채정. 2022.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국가미래전략 Insight 47호.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 이현주 · 정은희. 2016. “생애과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년기 건강: 초기 성인기 및 중년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다중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6(3): 53-84.
- 전병유 · 정준호. 2014. “소득, 자산의 다중격차: 소득, 자산의 결합분포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20(1): 105-134.
- 정민 · 민지원. 2018.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경제주평. 18-43(통권 818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정인관 · 최성수 · 황선재 · 최율. 2020.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2000년대 이후 경험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경제와 사회》, 127: 12-59.
- 정준호 · 전병유. 2020. “소득과 자산의 연계 불평등 현황 분석.”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3: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139-17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1-01.
- 정혜주 · Muntaner, Carles. 2011. “고용관계와 건강 불평등: 경로와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정책》, 18(2): 245-287.
- 지은정. 2011. “OECD 10 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생애주기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1): 333-370.
- 질병관리청. 2023.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제8기(2019-2021)》.
- 최병천. 2022. 《좋은 불평등》. 서울: 메디치미디어.

- 한국노동연구원. 2022. 《한국노동패널 1~24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 홍민기. 2015.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 《경제발전연구》, 21(4): 1-34.
- Atkinson, Anthony B. 1970.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2: 244-263.
- Deaton, Angus. 2018. *The Analysis of Household Surveys*. Washington DC: World Bank.
- Dutta, Indranil, & James Foster. 2012. “Inequality of happiness in the U.S.: 1971-2010.”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9: 393-415.
- Lohr, Sharon L. 2009. *Sampling: Design and Analysis*. Boston: Brooks/Cole.
- Niimi, Yoko. 2016. “What affects happiness inequality? Evidence from Japa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9: 521-543.
- Nussbaum, Martha. 2000. *Human capabilities, female human beings*. In M. Nussbaum & J. Glover (Eds.), *Women, Culture and Development: A Study of Human Capabili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vaska, Tomi, & Ryo Takashima. 2010. “Does a rising tide lift all the boats? Explaining the national inequality of happiness.” *Journal of Economic Issues*, 44(1): 205-224.
- Sen, Amartya. 1980. *Equality of what*. In S. McMurrin (Ed.), *The Tanner Lectures of Human Values* (pp. 257-280). Salt Lake City: Univ of Utah Press.
- Stevenson, Betsey, & Justin Wolfers. 2008. *Happiness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14220.
- Yang, Jidong, Kai Liu, & Yiran Zhang. 2019. “Happiness inequality in Chin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 2747-2771.

[홈페이지]

- 《재정경제통계시스템》. <https://www.nabostats.go.kr/stats.jsp?id=T188383000323998>
검색일 2023년 12월 30일.
- 《한국부동산원》. https://www.reb.or.kr/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111 검색일 2023년 12월 30일.
-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lc=en> 검색일 2023년 12월 30일.

Inequality Dynamics in South Korea: An Exploratory Analysis of Trends and Structures

Jiwon Kim, Dongwook Kim & Jun Koo

Inequality has recently emerged as a prominent issue in our society, leading to extensive research. Despite this, many existing studies predominantly adopt a fragmented perspective on inequality rather than structurally analyzing it based on the life cycle. This research attempts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in prior studies by exploring the manifestation of inequality grounded in the life cycle and analyzing the changing patterns of inequality through adolescence, adulthood, and old age. Firstly, we examine income inequality in South Korea over the past decade, educational inequality during adolescence, employment inequality in adulthood, and health inequality in old age.

Additionally,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associations of inequality across the life cycle, we employ explorato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nequality across the life cycle, revealing the structural dimensions of inequality in education, employment, and health. The empirical analysis yields predictive probabilities of inequality in these domains, offering substantial implications for policy efforts to address and mitigate inequality in our society in the future.

※ Keywords: Inequality, Life-cycle

